

검찰·경찰도 '박연차 돈' 연루

전·현직 정치인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법원·검찰·경찰 고위 관계자, 청와대 및 국세청 간부, 기업인에 이르기까지 박연차 리스트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도대체 그 끌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죽었으면 “부산·경남지역에서 기관장을 하거나 이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인이라면 누구든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다.

◇정치인과 지자체장=대검찰청 중수부는 박 회장으로부터 각각 5억 원짜리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송은복 전 김해시장과 이정숙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을,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을 속속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원화와 달려 29억 정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같은 당 서갑원(순천) 의원과 한나라당 권경석(창원갑) 의원 등의 소환도 임박한 상황이다.

또 부산에서 활동했던 J 전 한나라당 의원이나 J·Y 전 열린우리당 의원, 혁명의원 한나라당 K 의원과 민주당 K, J 의원 등도 검찰의 추가 조사 대상이라는 설이 난무하고 있으나 이들은 한결같이 “박 회장을 잘 알지도 못하고 불법 정치자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04년 박 회장의 베트남 공장을 방문했던 권철현 주일 대사의 이름도 한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하지만, 권 대사는 26일 “그와는 두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단돈 10원도, 1달러도 받은 적 없다”며 해당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김혁규 전 경남지사와 박 회장의 친해, 땅 고도제



경남 김해시 진례면에 위치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소유의 음식점 금호가든. 박 회장은 금호가든에서 정관계 인사들을 접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가든 관리인들은 취재진의 접근을 막고 있으며 주민들은 작년 2월 말부터 금호가든이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선거에 나선 후보 층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26일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여야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결정으로 일단 관련법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 자체는 유효하지만, 현행 법 적용이 중지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전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개정 법률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나라당 장운석 제1정조위원장 위원장은 법 개정방향과 관련, “형사법의 벌금조항처럼 하한과 상한을 두도록 하되 선거관리위원회나 법원 등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개별사건의 정상을 참작해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처벌 주장도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이병재 의원은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 단순히 50배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아니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형사처벌 신설을 주장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무차별적 으로 동일한 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사안별로 구분해서 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금을 주는 것과 밥을 함께 먹는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다. 민족을 위한 만큼 음식물과 물품, 현금 등 사례별로 차별화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

견을 제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선거법 위반행위의 양태는 다양한데 제재 방법은 획일적이어서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과중 할 처벌이었다”며 “다만 법 개정시 정치풍토 정화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호 대변인은 “정상작용이 불가능한 가혹한 법적용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기부금품액에 따른 과태료 차등 적용,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등 합리적 기준을 토대로 한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직원급여이나 부당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주민소환제’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검사장급·前 경찰총수 2명 수수 의혹

권철현 주일 대사도 … 본인은 부인

한 완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김태호 현 경남지사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김 지사는 해당 언론사 기자를 고소하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법원·검찰·경찰=박 회장은 지역에서 근무한 경찰, 경찰은 물론 관사들과도 친하게 지내며 전별금이나 응돈을 주는 것은 물론 인사 척탁도 들어왔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금품수수설이 제기된 지방 고법부

장관사는 “박 회장과 면식이 있는 사이는 맞다. 그러나 금전거래는 없었다”고 말했고, 검사장급 검찰 간부 1명과 부부장검사 1명도 같은 입장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직 경찰총수 2명과 치안정감 1명, 치안감 1명도 부산·경남지역에서 근무할 때 박 회장으로부터 최소 10만 원에서 수십만 원 달러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 고위인사 등=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척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주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인사검증 및 편의제공 척탁 명목으로 삼품권 1억 원 어치를 받은 혐의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각각 구속했다.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인 이종찬 전 수석도 최근 박 회장 구명 로비 및 금전거래 의혹이 제기돼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이다.

이 전 수석의 동생은 박 회장과의 돈거래에 대해 “박 회장으로부터 2003년 3월 사업자금 7억 원을 빌렸다가 2008년 2월 반환했다. 2003년 3월 초 형님(이 전 수석)에게 변호사사무실 임차보증금 5억 4천만 원을 빌려드렸다가 받았지만 이는 형님의 공직 수행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기틀을 잡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꼬리표는 참여정부 시절 내내 그를 괴롭혔다. 지난 정권부터 진행된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이광재’라는 이름이 등장했던 것.

지금까지 진행된 6번의 특검 중에 노 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유전사업 비리의혹 등 2번은 사실상 이 의원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을 향한 검찰의 수사와 내사는 10여 차례에 달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사는 눈물까지 흘리며 이 의원을 만류했지만 이미 오래전 침거에 들어간 이 의원의 뜻을 꺾지는 못했다고 한다.

이후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이 의원은 상황이 여의치 않자 2004년 17대 총선에서 강원도 태백·정선·영월·평창의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원내에 입성했고, 작년 4월에는 재선에도 성공해 정치인으로서는 재선에도 성공해 정치인으로서는

“사례별 제재”에서 “형사처벌”까지 다양

■ 정치권 ‘50배 과태료’ 헌법불합치 반응

선거에 나선 후보 층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

항에 대해 26일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여야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결정으로 일단 관련법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 자체는 유효하지만, 현행 법 적용이 중지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전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개정 법률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나라당 장운석 제1정조위원장 위원장은 법 개정방향과 관련, “형사법의 벌금조항처럼 하한과 상한을 두도록 하되 선거관리위원회나 법원 등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개별사건의 정상을 참작해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정가 라운지

김동철 의원 하도급 개선 법안 발의

박인환 의장 섬진강 살리기 촉구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26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의무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급인을 상대로 한 하도급대금 지급 판결만으로도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관공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도급계약 금액이 공사 예정가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해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토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재순 최고 “산지 세금도 감면해야”

○…한나라당 박재순 최고위원은 26일 최고위원회에서 “산지(山地) 도농지와 같이 양도세와 상속세·증여세를 감면하는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과 같이 8년 이상 자경산지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농자녀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감면해주고 있는 만큼 모든 산지에 대해서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213만평의 산림소유지에 대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임업인 발굴과 산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희호 북구의장 58억 최고

○…광주 북구의회 구희호 의장이 광주시 자치구의원 중 재산총액(58억 6천만 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2위는 남구의회 최민순 의원(32억 6천 300만 원), 3위는 광산구의회 선덕희 의원(23억 1천 900만 원)이었다.

재산증가 폭이 가장 큰 의원은 광산구의회 박삼용 의원으로 10억 원 증가했다. 박 의원은 자녀의 부동산 취득에 따라 이같이 신고했다. 광산구의회 전양복 의원은 재산총액이 가장 적은 의원으로, -8억 9천 400만 원을 신고했다. 의원들의 전체 평균 재산은 4억 4천 500만 원으로, 1년 새 800여 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 의원직 사퇴 선언 이광재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검찰과의 질긴 ‘악연’ 끝에 마침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던 26일 의원직 사퇴의 뜻을 밝힌 이광재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과 함께 ‘좌(左)회경, 우(右)광재’로 불릴 정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했다.

노 전 대통령이 처음 정치에 입문한 80년대 후반부터 보좌진을 맡았

검찰 수사·내사만 10차례 ‘악연’

던 그는 2002년 대선 승리 때까지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면서 참여정

부 탄생의 주역을 맡았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청

와국정상황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지만 당시 청장비 원내대표가

“정보와 권력을 독점한 문제의 핵

심인물을 경질해야 한다”고 이

의원의 퇴진을 요구, 결국 1년도 못돼

청와대를 나와야 했다. 당시 권양숙

여사는 눈물까지 흘리며 이 의원을

만류했지만 이미 오래전 침거에 들어간 이 의원의 뜻을 꺾지는 못했다고 한다.

이후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이

의원은 상황이 여의치 않자 2004년

17대 총선에서 강원도 태백·정선·

영월·평창의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

마해 원내에 입성했고, 작년 4월에

는 재선에도 성공해 정치인으로서는

기틀을 잡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꼬리표는 참여정부 시절 내내 그를 괴롭혔다. 지난 정권부터 진행된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이광재’라는 이름이 등장했던 것.

지금까지 진행된 6번의 특검 중에 노 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유전사업 비리의혹 등 2번은 사실상 이 의원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을 향한 검찰의 수사와 내사는 10여 차례에 달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의경 및 경찰행정학과 특채/남·여 순경 공채

수시 접수 중 (종합 및 문제풀이)

경찰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 합격 시스템

6개월 과정
• 2개월 원성 3회 번복 학습
•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함
• 수강료 교재 25% D/C

1년 과정
• 2개월 원성 6회 번복 학습
•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함
• 수강료 교재 50% D/C 교재 25% D/C

순경공체

• 남·1차: 966명
• 여·1차: 40명
• 100단·1차: 120명
• 2차: 214명
• 2차: 47명
• 2차: 120명

특 채

• 전의경 특채 240명
• 경찰 행정학과 특채 100명
• 경찰 특공과 특채 38명

* 종합 1개월 : 16만 원 · 문제풀이 1개월 : 13만 원 · 단과 : 9만 원

경찰 메가경찰학원